

POLITICS

2025년 4월 4일 금요일

혁신당, 호남진출 교두보...민주당 대항마 급부상

공공건축물 건설 신뢰도 향상 시 종합건설본부 개선안 추진

광주시가 공공건축물 하자 예방을 위해 '시공 자문 실무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공공건축물 건설사업 관리의 신뢰도 향상에 나섰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공공건축물 건설사업의 기획 및 설계 단계 협업 강화, 하자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디지털 기반 업무 공유 및 소통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건축물 건설사업 관리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

우선 기획단계부터 기획부서, 종합건설본부, 공공건축 전문가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기획과 실행 간 불일치를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기획용역 단계부터 설계안료 단계까지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예측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피드백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하자예방을 위해 '시공 자문 실무전담팀(TF)'을 운영한다. 착공부터 설계변경 검증 및 방수공사 등 주요 시공 단계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전문가도 참여해 예방을 통한 실제적 하자 대응에 나선 예정이다.

매월 감독공무원의 안전 점검과 현장소장의 일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주요 골조공사의 영상 촬영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한다.

온라인 기반의 업무공유시스템을 운영해 공사 관리 노하우와 사례를 공유한다. 수평식 토론형 학습문화를 정착시켜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 단절을 없애고 실무자의 전문성 확보와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승기 기자 sky@

광주시 초등학교 3곳 대상 '감염병 예방학교' 시범 운영

광주시가 수도·백일해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광주시는 3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감염병 예방학교 운영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운영협의체는 광주시,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광주시교육청, 감염병관리지원단, 보건소, 초등학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초등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광주지역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수도·백일해 등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교와 같은 집단생활을 하는 환경에서는 적절한 감염병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발병으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

특히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은 지역사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예방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날 운영협의체 회의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감염병 예방학교'를 도입,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학교에서는 감염병 예방학교 운영협의체 구성·운영,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속 대응체계 운영,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학교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감염병 예방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이들 기관은 감염병 예방학교 추진 배경과 주요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기관별 역할도 부여했다.

광주시는 학교 감염병 신고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청-보건소-학교 등과 협력을 구축해 운영한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학생 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감염병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첫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배출...내년 지방선거 기대감 민주 이재명 대표 "담양 민심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

4·2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정철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꺾고 당선되며, 혁신당은 첫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향후 정치적 입지를 확장할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에 따르면 4·2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 후보는 1만2860표(51.82%)를 얻어, 1만1956표(48.17%)를 득표한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904표차로 꺾고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것이다.

아직 군 단위의 기초단체장이지만 호남에서 민주당 독식 구도를 깨고 진보 세력의 대안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선 혁신당이 민주당에 접전 끝에 고배를 마셨으나 이번 재선거에선 당선인 해 배출함으로써 호남의 민주당 독식 구도를 깬다.

여러 여건상 혁신당의 이번 선거는 지난 재보선보다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국 전 대표가 자리를 비워 존재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패했던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혁신당 지지 선언과 이 후보의 재산신고 의혹 등이 맞물리면서 정 후보는 선거 승기를 굳혔다.

담양군수에서의 귀중한 승리로 혁신당은 내년 호남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혁신당은 향후 호남에서 대안세력으로 자리잡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뿐만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 및 시·도의회의 의원들에 대해



민주당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공동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기본사회위원회, 내일 김대중센터서 출범

위원장 이재명·광주 전진숙...메머드급 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광주기본사회위원회가 오는 5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출범 이후 광역단체별 위원회 구성을 통해 당의 주요 조직으로서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이 광주기본사회위원장을 맡았으며, 수석부위원장단은 강행욱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박덕은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 대표

회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13인으로 구성됐다.

또 광주 5곳 구청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주요 정책들을 발굴할 정책자문단, 각 분야를 대표하는 150여 명의 부위원장 단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전 행사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본사회의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이자,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꼽히는 민주연구원원인 이한주 원장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기본사회는 민주주의다, 성정이다. 복지"는 주제로 향후 민주당의 기본사회 정책적 방향과 지향점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진숙 위원장은 "당이 지향하는 기본사회는 단순히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권·자유권·참정권·사회권 등 국민의 모든 기본권의 묶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회이다"며 "더 나아가 기본적인 삶, 동등한 기회, 실질적 자유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이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지역에서 만들어 가야 할 실천적 운동에 많은 광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형 만원주택’, 곡성·장흥·강진·영암도 혜택**

**도, 50호씩 일괄공급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기대**

전남도가 야심차게 선보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인구 정책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2차 사업 대상지로 곡성, 장흥, 강진, 영암, 4개 군(207호)을 새롭게 선정했다.

2026년까지 전남형 만원주택 착수해 2028년까지 준공하고, 향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고흥, 보성, 진도, 신안을 1차 대상지(210호)로 선정해 데 이은 후속

사업으로, 2035년까지 16개 군에 총 1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군에는 각 50호씩 200호를 도에서 일괄 공급하며, 군비를 투입하는 곡성군은 3호, 장흥군은 4호를 추가해 총 207호의 만원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확정된 210호를 합하면 417호의 전남형 만원주택이 공급된다.

만원주택 도입 2년여 만에 1000호 공급 목표의 42%를 달성하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별 선정 사유는 △영암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영암읍 콤팩트

시티 조성사업 추진 △곡성군은 금호타이어 공장 일지리 지속 창출 △장흥군은 장흥바이오산업단지 대규모 기업유치로 산업 활성화 기대 △강진군은 중국 기업 유치 확정 및 구 성내대청년클러스터 사업 등으로, 청년층의 유입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이번 선정 지역은 1차 선정지와 같이 도심지에 위치하며, 초등학교, 보육시설,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입주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앞으로도 청년층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서도 후보를 최대한 많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호남 맹주를 자처해온 민주당에는 뼈아프게 여겨진다. 특히 담양은 전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담양의 민심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거 기간 많은 호남 시민이 '매번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지만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호된 질책을 내려주셨다"며 이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민심을 가슴에 새기고 정치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민생 회복에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국에서 펼쳐진 4·2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귀한 한 표가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귀한 씨앗이 될 것"이라며 "주권자의 존엄한 의사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야당이 열세로 평가받았던 경남 거제시장에서 민주당 변광웅 후보가 당선되고 부산 교육감에 진보 진영 김성준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부산과 거제 시민분들께서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다"며 "변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한 데 모인 결과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텃밭인 담양군수 선거에서 패배한 데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어업재해 지원강화법’ 국회 통과 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어업피해도 보상 가능

앞으로 민물고기마루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 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산양식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보험에 가입한 농·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기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차재 담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차보상과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이 국가로부터 더 두텁게 지원받고, 걱정 없이 농어업 경영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원이 "김 종자산업 지원법 국회 통과"

개정안 대표발의... 김 가공품 기술 개발·지원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중기위 간사, 목포·사천)은 3일 "대표 발의한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과 김 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해양수산부가 5년 마다 수립·시행하는 김 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다.

김 산업이 고도화돼 김 종자 개발 및 생산, 물김 생산, 마른김 제조 및 유통은 각각 분업화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김에 특화된 종합적인 연구개발 육성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의 종자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생산지원 등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김 산업의 첫 단계인 종자 배양 및 생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김 생산의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

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농해수위 전문위원과 김 산업연합회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가지며 김 종자 산업의 특성 및 배양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왔다.

22대에선 농해수위 여야 간사와 소통하며 법안 상정을 요구하고, 해당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직접 설득해왔다.

김 의원은 국내 김 생산의 80% 내외를 담당하는 전남도에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담기관인 '한국김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목포시의 김 수출액은 2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김 수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개정안 통과로 김 종자 산업을 포함해 종합적인 김 산업 진흥을 돕고 수출확대로 목표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김공사 설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